

지방이 소멸한다, 대책은?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 오후 14:00~16:00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101호)

주최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관 :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회

인사말씀

2016년 우리는 '국가성'(stateness)의 위기를 촛불민회에 이은 탄핵심판,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힘들게 빠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도처에 상존하고 위기인듯 아닌듯 우리의 관심을 어지럽히면서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문제 역시 우리가 감당해 풀어나가야 할 큰 도전이자 잠재적 위기입니다.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은 2016년부터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국가정책 과제들을 서울대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을 열어 왔습니다. 이번에 지방위기에 따른 지방소멸을 주제로 정한 것은 이미 지방위기가 날로 악화되고 지방도시들의 소멸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지방소멸이라는 이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지, 주제발표와 토론, 숙의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충지를 모아 보고자 합니다.

포럼이 한국사회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11. 28.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장 홍준형 드림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회:

강원택, 김병연, 김석호, 김의영, 유명순, 윤순진, 장덕진, 최현자)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진행

좌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장)

14:00~14:15

축사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14:15~15:15

"지방위기냐 지방소멸이냐?: 지방활력의 시사점"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학의 역할"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

15:15~15:40

종합토론

구양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이병렬 (우석대 교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15:40~16:00 Q&A

질의응답

지방위기냐 지방소멸이냐?: 지방활력의 시사점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지방위기냐? 지방소멸이냐 : 지방활력의 시사점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SSK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장)

어유경(SSK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 연구원)

양은진(SSK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 연구원)

2010년과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 비교

과거 추계와의 비교

- ▶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5년 사이 주요 지표들이 개선됨
 - ▶ 아동층 및 20-39세 여성층의 감소폭이 줄어들음
 - ▶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이 커짐
 - ▶ 노인층의 증가폭이 줄어들음
- ▶ 주요 지표들의 개선으로, 향후 지방소멸 위험이 기존 추계값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65세이상 인구	20-39세 여성
2005	8,480,253	31,954,117	4,167,895	7,243,268
2010	7,350,831	32,998,936	5,180,434	6,681,758
2015	6,493,041	34,295,439	6,267,829	6,285,910
2005->2010 변화율	-13.3%	3.3%	24.3%	-7.8%
2010->2015 변화율	-11.7%	3.9%	21.0%	-5.9%

3

지방소멸위험지수 추계

지방소멸위험지수

- ▶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인구 수)
- ▶ 20~39세 여성인구가 고령자 수의 절반 미만이면(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 해당 지역의 소멸위험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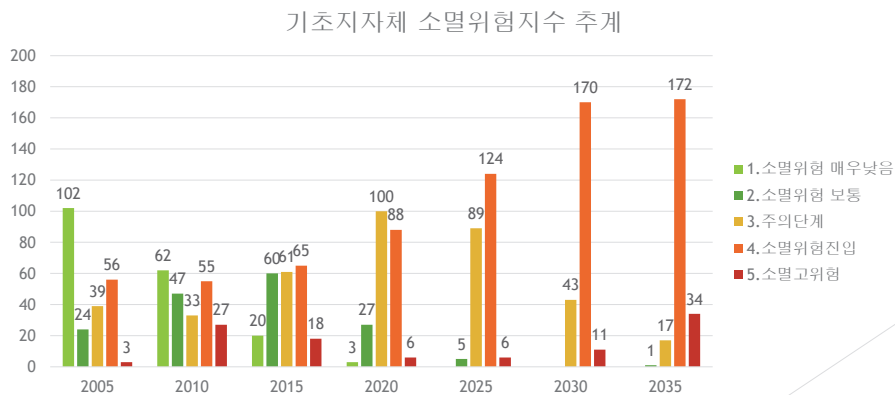
유형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주의단계	0.5-1.0 미만	
소멸위험	소멸위험 진입	0.2-0.5 미만
	소멸 고위험	0.2 미만

*마스다 히로아(2014)의 『지방소멸』을 바탕으로 개발된 지수로, 이상호(2018)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서 사용된 분류 기준을 적용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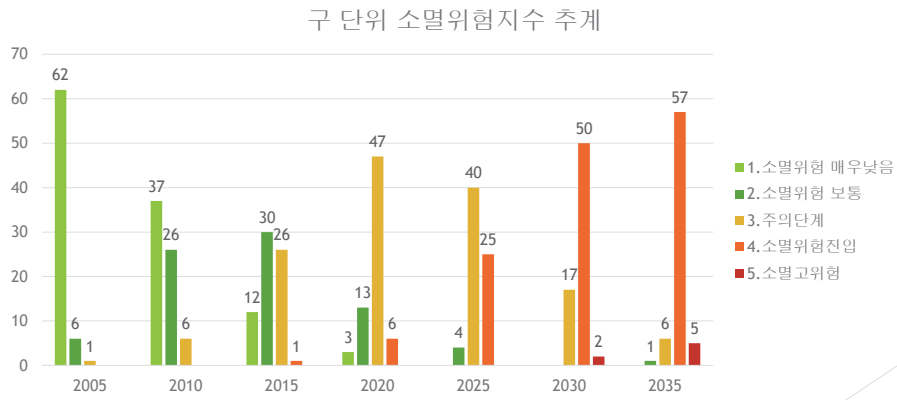
기초지자체 소멸위험지수 추계

-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의 수)/(65세 이상 인구의 수)로 측정함
- 기초지자체의 소멸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35년에는 1곳(소멸위험 보통)을 제외한 모든 곳이 주의단계 이상으로 위험수준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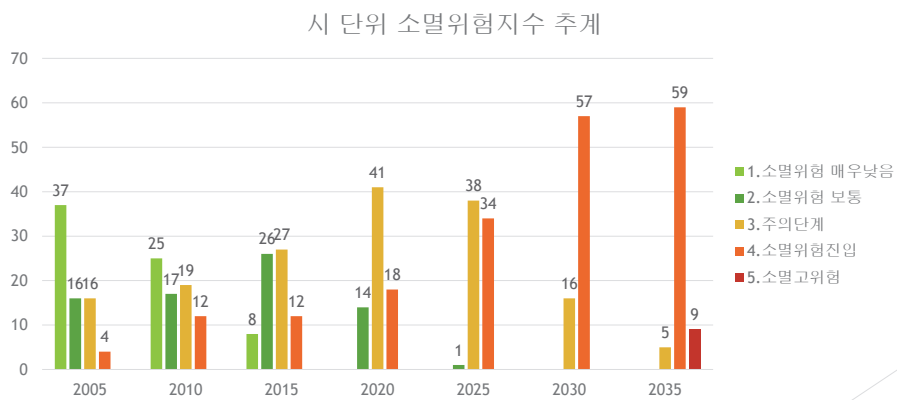
6

구 단위 소멸위험지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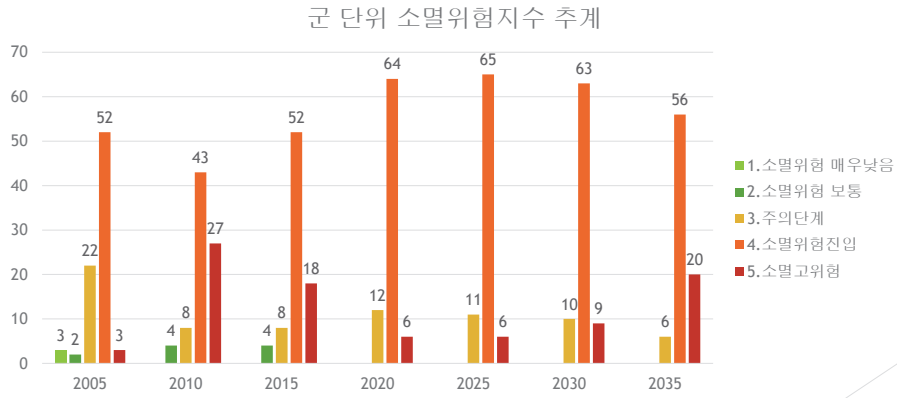
7

시 단위 소멸위험지수 추계



8

군 단위 소멸위험지수 추계



9

소멸위험 변화 지역

- 소멸위험이 2015년보다 2035년에 더 높아지는 기초지자체는 156곳임(삼각형안)
- 2035년에 소멸위험이 더 낮아지는 지자체는 15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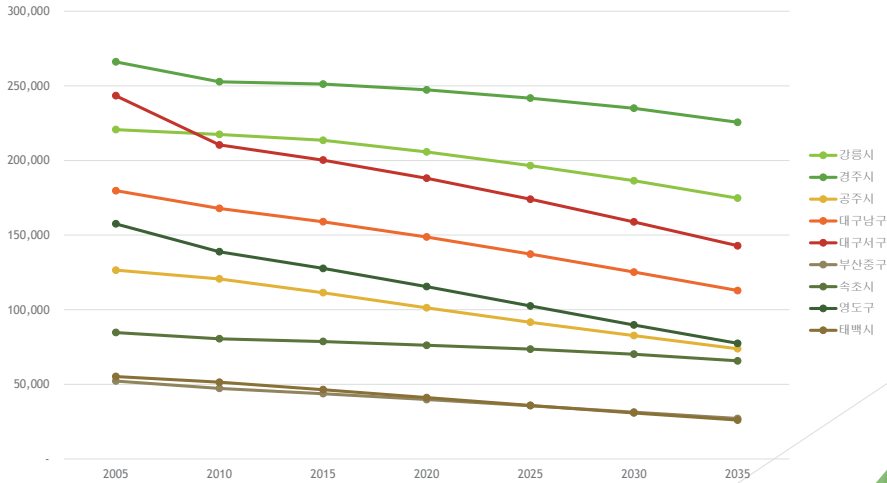
	2035년					총합계
	1.소멸위험 매우낮음	2.소멸위험 보통	3.주의단계	4.소멸위험진입	5.소멸고위험	
2015년 1.소멸위험 매우낮음			6	14		20
2.소멸위험 보통		1	4	55		60
3.주의단계			3	49	9	61
4.소멸위험진입			3	43	19	65
5.소멸고위험			1	11	6	18
총합계	1	1	17	172	34	224

- 청원시와 청주시는 분석대상기간 중 주변 지자체와 통합하였으므로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10곳 (청원시: 2010년 7월 마산시, 전혜시와 통합) (청주시: 2014년 7월 정원군과 통합)

10

소멸주의단계→고위험 지역 - 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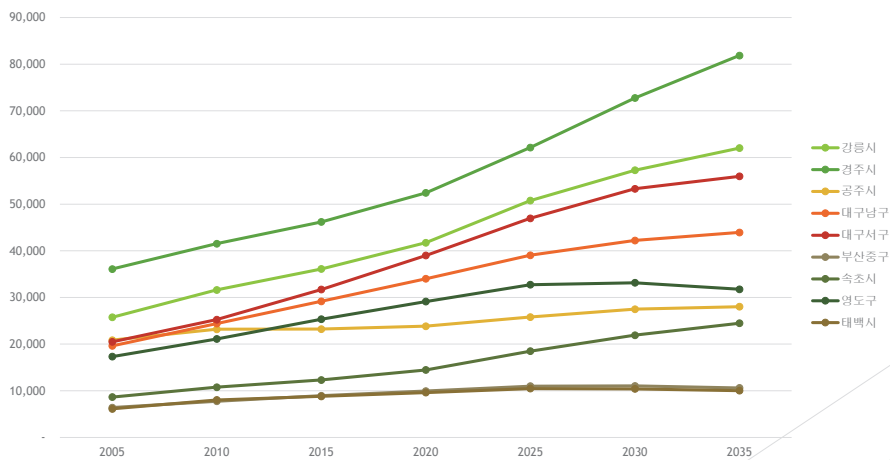
- 2015년 소멸주의 단계였으나 2035년 고위험으로 위험수준이 급증한 지자체는 9곳임
- 주로 지방대도시의 구 또는 시 지자체임. 인구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함



11

소멸주의단계→고위험 지역 - 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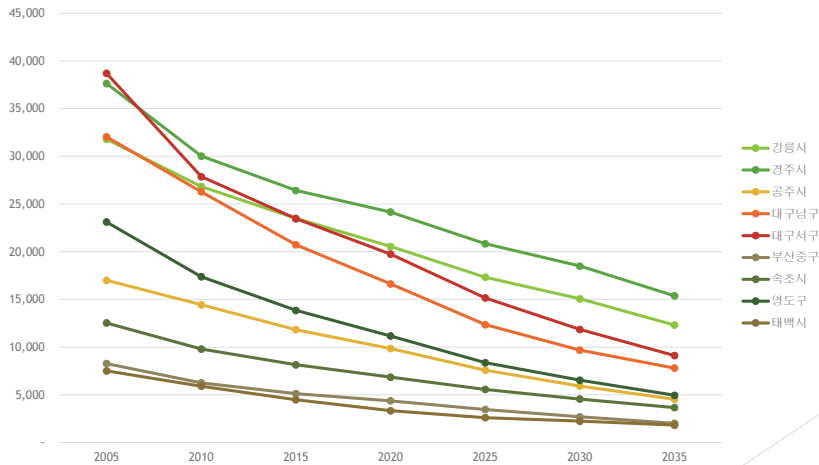
- 소멸위험 급증지역에서 노인인구의 수도 증가추세임



12

소멸주의단계→고위험 지역 - 20~39세 여성

- 소멸위험 급증지역에서 20~39세 여성의 수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임



13

기초지자체 소멸위험지수 추계

- 그러나, 소멸위험 수준과 인구감소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소멸위험이 높았던 지자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적어도 2035년까지는 나타나지 않음
- *본 추계에서 전국 인구는 2030년까지 증가하고 2035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소멸위험진입 수준의 인구 2~5만 지자체는 30곳임.
2035년에는 이중 다수의 지자체가 인구 5만 이상이 되어 23곳으로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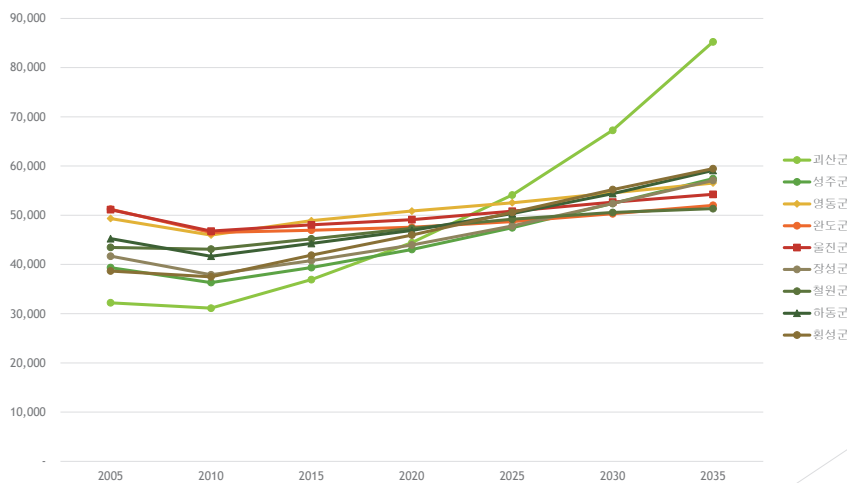
	2015					2035					총합계
	2만 미만	2~5만	5~20만	20~50만	50만 이상	2만 미만	2~5만	5~20만	20~50만	50만 이상	
1.소멸위험 매우낮음			2	12	6			1	10	9	40
2.소멸위험 보통		1	11	35	13		1	10	32	17	120
3.주의단계		6	28	26	1		5	31	25		122
4.소멸위험진입	2	30	33			1	23	39	2		130
5.소멸고위험	1	15	2			1	14	3			36
총합계	3	52	76	73	20	2	43	84	69	26	448

14

2015년 소멸위험진입인 2~5만 인구 지자체(30곳)	2015년 소멸위험진입이었으면서 2035년 인구 2~5만 지자체(21곳)	2015 소멸위험진입인 2~5만 인구 지자체였으나 2035년 인구가 5만 이상으로 증가한 곳(9곳)
연천군	연천군	횡성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영월군	평창군	영동군
평창군	정선군	괴산군
정선군	강원고성군	장성군
철원군	양양군	원도군
강원고성군	보은군	성주군
양양군	옥천군	울진군
보은군	단양군	하동군
옥천군	청양군	
영동군	진안군	
괴산군	무주군	
단양군	장수군	
청양군	순창군	
진안군	담양군	
무주군	국성군	
장수군	구례군	
순창군	장흥군	
담양군	강진군	
국성군	장성군	
구례군	완도군	
장흥군	고령군	
강진군	장성군	
장성군	완도군	
완도군	고령군	
고령군	성주군	
성주군	울진군	
울진군	하동군	
하동군	함양군	
함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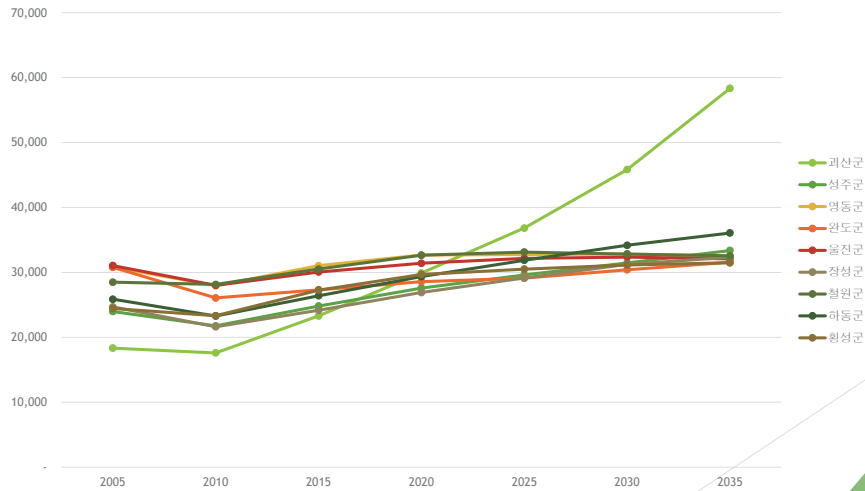
- 2015년 소멸위험진입 수준이면서 인구가 2~5만이었으나 2035년에는 인구가 5만 이상으로 증가한 지자체는 9곳임

인구가 증가한 소멸위험진입 지역-총인구



인구가 증가한 소멸위험진입 지역-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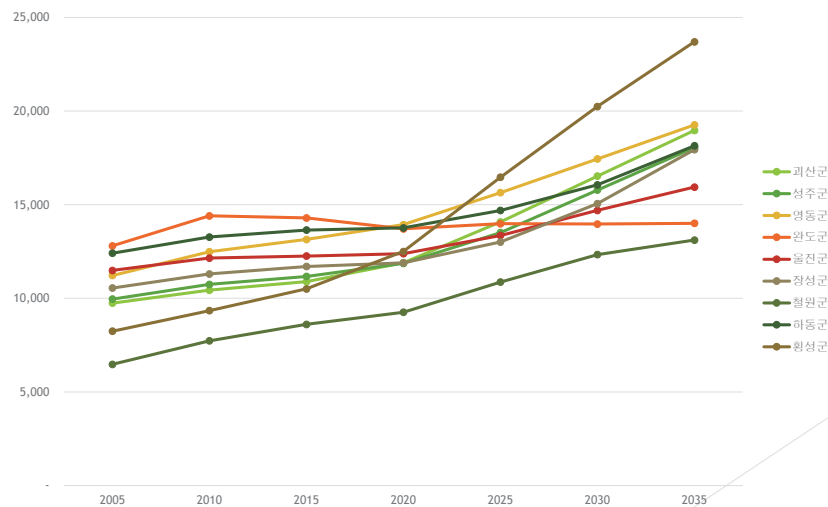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증가하였음
- 증가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인구가 늘어남



17

인구가 증가한 소멸위험진입 지역-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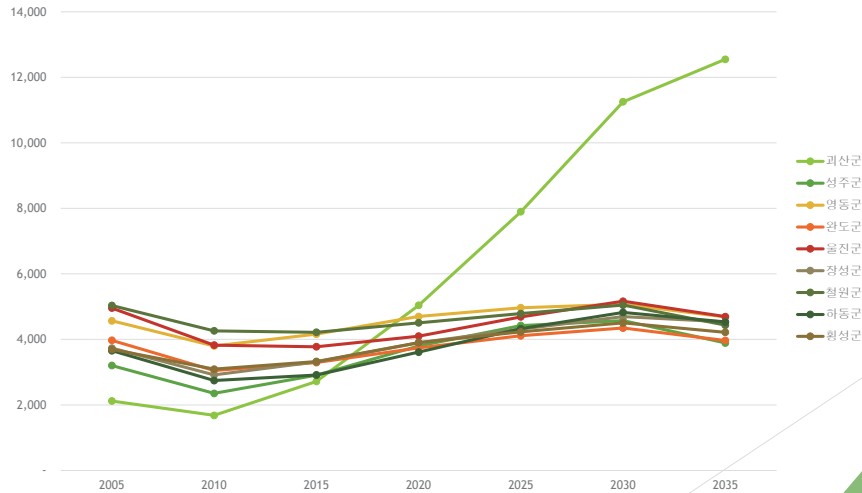
- 노인인구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은 2035년까지는 소멸위험보다는 고령화율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음



18

인구가 증가한 소멸위험진입 지역-20~39세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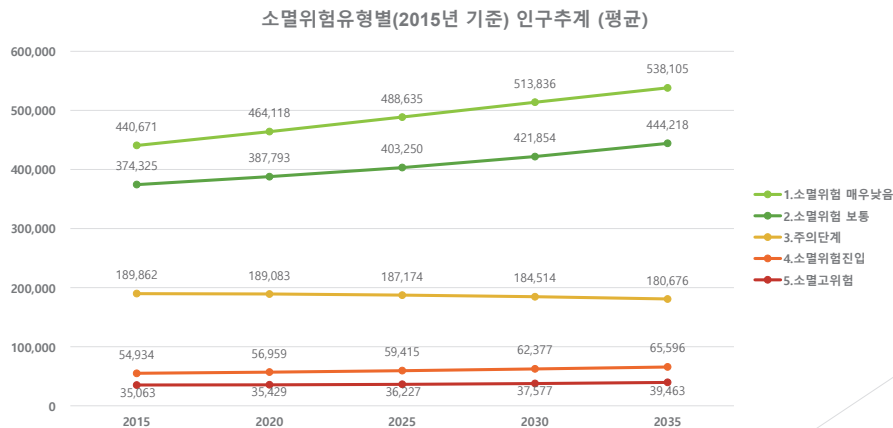
- 20~39세 여성의 수도 2030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2035년에는 감소하기 시작함
- 해당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20~39세 여성의 수 또는 출산률보다는 순이동의 증가, 즉 이주해오는 인구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됨



19

소멸위험유형별(2015 기준) 인구추계

- 대부분의 소멸위험유형별 지자체에서 인구는 2035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주의단계' 수준의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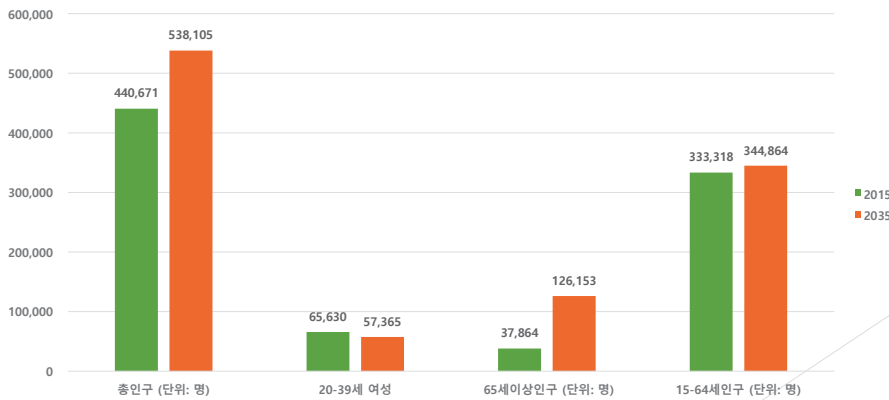


20

소멸위험지수별 인구추계(2015 기준, 평균)

1. 소멸위험 매우 낮음

- 소멸위험이 매우 낮았던 지자체는 총인구가 증가함
- 노인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20-39세 여성 인구는 다소 감소함. 생산 가능인구도 다소 증가하는데 그침
- 즉, 이 시기의 인구 증가는 베이비부부 세대 다수가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으로 보이며 고령화율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음



21

소멸위험지수별 인구추계(2015 기준, 평균)

2. 소멸위험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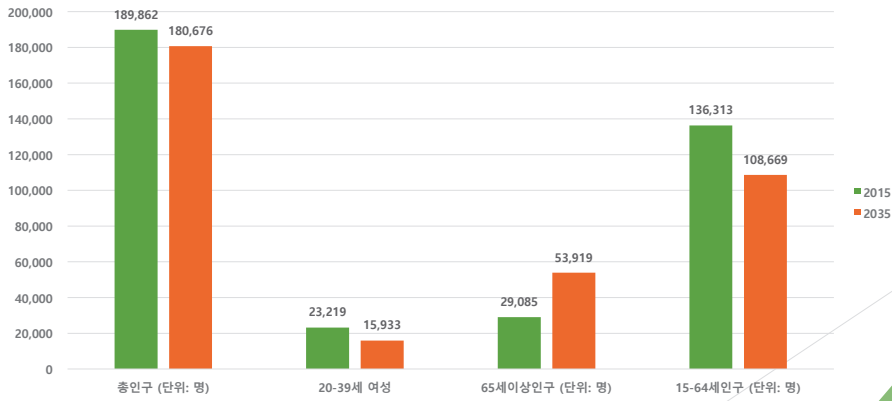
- 소멸위험 수준이 보통이었던 지자체도 낮았던 지자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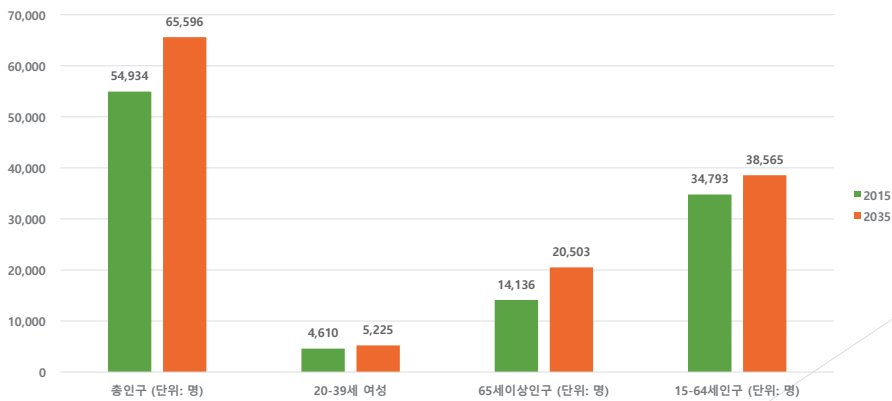
소멸위험지수별 인구추계(2015 기준, 평균) 3. 주의단계

- 위험이 주의단계 수준인 지자체는 유일하게 총인구가 감소함
- 이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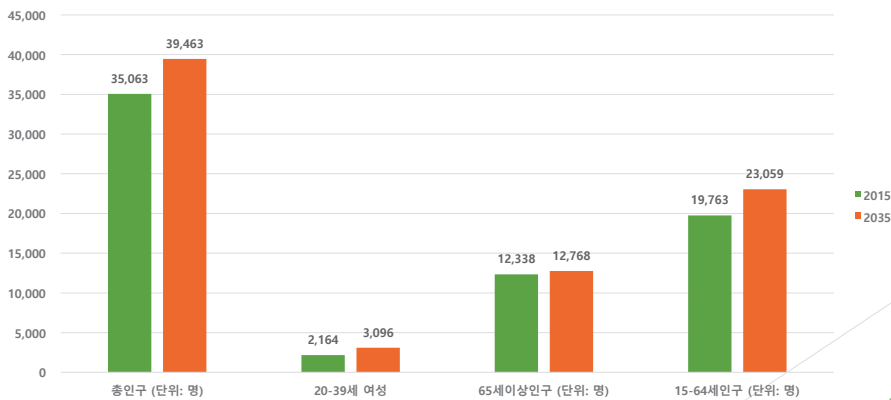
소멸위험지수별 인구추계(2015 기준, 평균) 4. 소멸위험진입

- 소멸위험진입 지역의 총인구는, 소멸위험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함



소멸위험지수별 인구추계(2015 기준, 평균) 5. 소멸고위험

- 소멸고위험 지역 또한 인구가 증가함
- 소멸위험진입 지역은 노인인구도 증가하였으나, 고위험 지역은 노인인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음
-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함
- 따라서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는 농촌(군) 지역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전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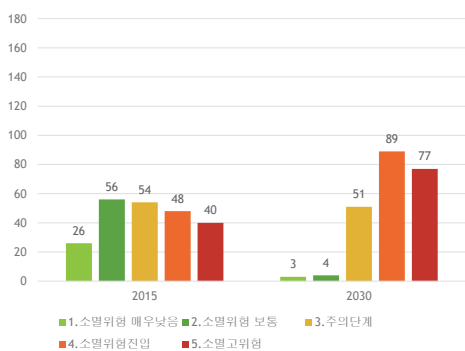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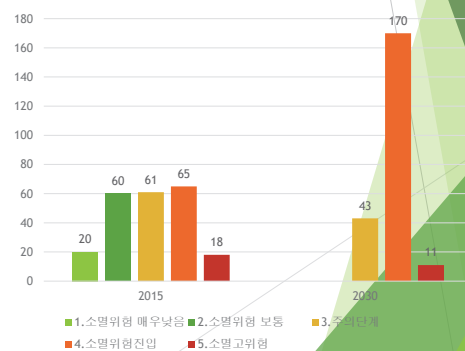
과거 추계와의 비교

- ▶ 2005-2010년 사이의 변화율을 중심으로 한 과거 추계와, 2010-2015년 사이의 변화율을 중심으로 한 본 분석의 추계를 비교
- ▶ 현재(2015년) 소멸고위험 지역 수는 과거 예측한 수치보다 적음(40->18)
- ▶ 과거 추계에서 2030년 소멸고위험 지역 수는 77곳으로 예측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11곳이 될 것으로 예측됨

과거 추계(2005-2010년 변화율 중심)



본 분석의 추계(2010-2015년 변화율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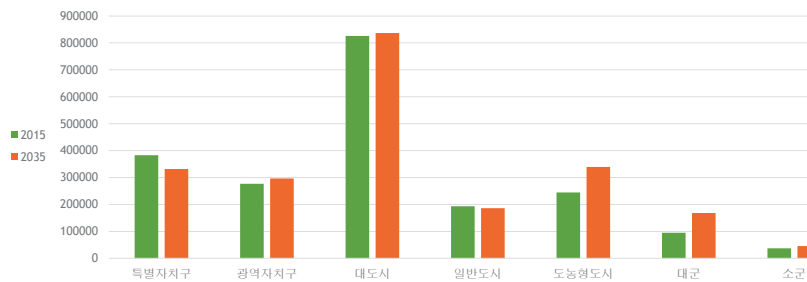


26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 유형별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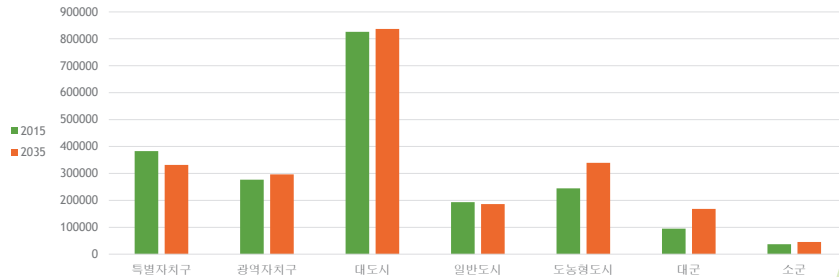
- ▶ 농촌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 특히, 현재 인구가 6만 이상인 대군은 2015년 대비 2035년 인구가 77.6% 증가함



(평균)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복합시	6만 이상 군	6만 미만 군
수(2015년 기준)	25	44	7	14	52	18	64
2015	382,688	276,812	825,740	193,590	244,674	94,916	37,303
2035	331,550	296,378	836,353	186,398	339,437	168,541	45,821
변화율	-13.4%	7.1%	1.3%	-3.7%	38.7%	77.6%	22.8%

1. 유형별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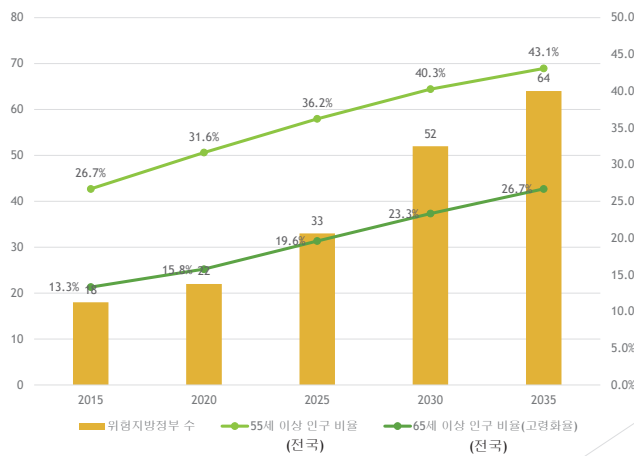
- ▶ 도시는 유형에 따라 인구 증감률이 다를 것으로 예측됨
 - ▶ 도농복합시의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38.7%)
 - ▶ 50만 이상 시는 비슷한 인구규모를 유지하지만, 50만 미만의 시는 인구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3.7%)
 - ▶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13.4%),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7.1% 증가할 것으로 보임



(평균)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복합시	6만 이상 군	6만 미만 군
수(2015년 기준)	25	44	7	14	52	18	64
2015	382,688	276,812	825,740	193,590	244,674	94,916	37,303
2035	331,550	296,378	836,353	186,398	339,437	168,541	45,821
변화율	-13.4%	7.1%	1.3%	-3.7%	38.7%	77.6%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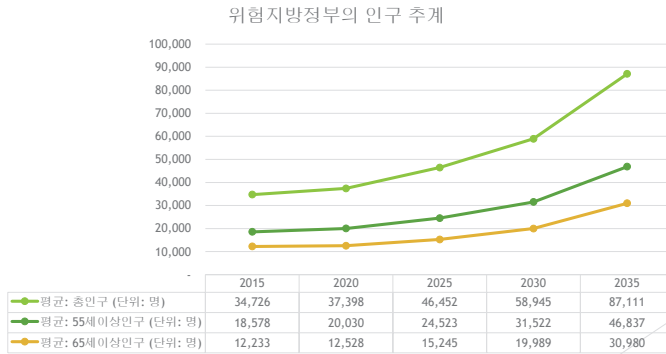
2. 위험지방정부 추계

- ▶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위험지방정부'는 2015년 18곳에서 2035년 64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 임계지방정부(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는 2035년까지 나타나지 않음



2. 위험지방정부 추계

- ▶ 각 연도 위험지방정부들의 평균 총 인구는 2035년까지 증가 추세임
 - ▶ 평균 5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인구도 증가 추세임
- ▶ 이는 인구가 많았던 지역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위험지방정부에 편입되면서 평균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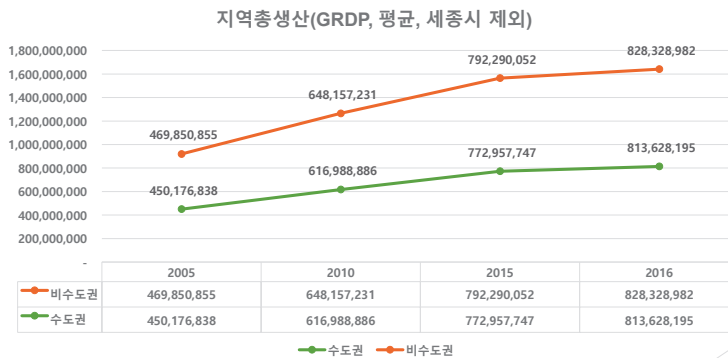


31

3.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지역총생산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그 외 지역)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의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 지역총생산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으나 그 수준이 비슷함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의 차이는 2005년에 2.1%였으나 2015년 1.2%, 2016년 0.9%로 그 차이가 감소하였음



자료: KOSIS, e-지방지표: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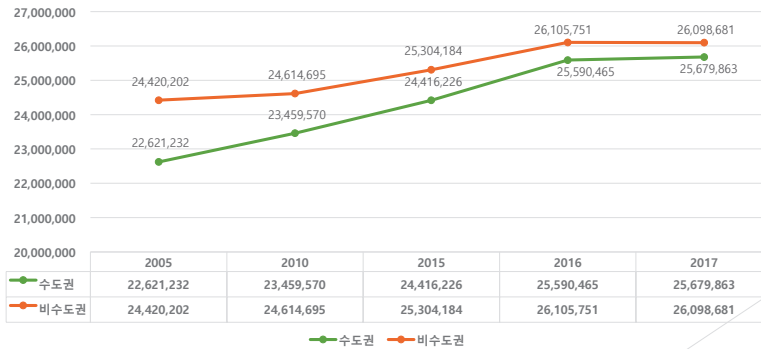
32

3.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인구추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그 외 지역)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수의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 인구 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으나 그 수준이 비슷함
- ▶ 2010년부터 세종시의 인구 수가 반영되었음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수의 차이는 2005년에 3.8%였으나 2015년 1.8%, 2016년 1.0%, 2017년 0.8%로 그 차이가 감소하였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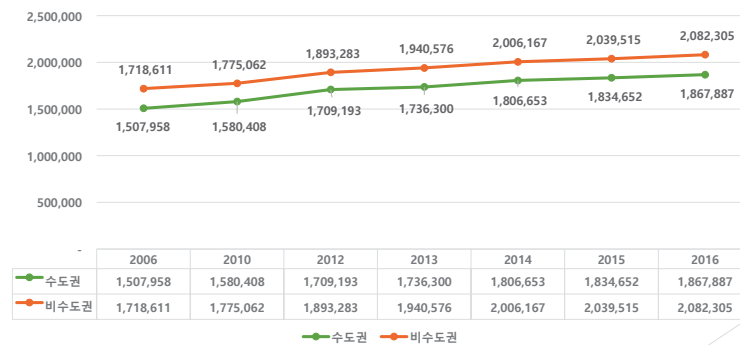
자료: KOSIS, e-지방지표: 주민등록인구

3.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총 사업체 수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그 외 지역)

- ▶ 총 사업체 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으나 그 수준이 비슷함
- ▶ 2012년부터 세종시의 사업체 수가 반영되었음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 사업체 수의 차이는 2006년에 6.5%였으나 2015년 5.3%, 2016년 5.4%로 었음

총 사업체 수



자료: KOSIS, e-지방지표: 시도산업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3.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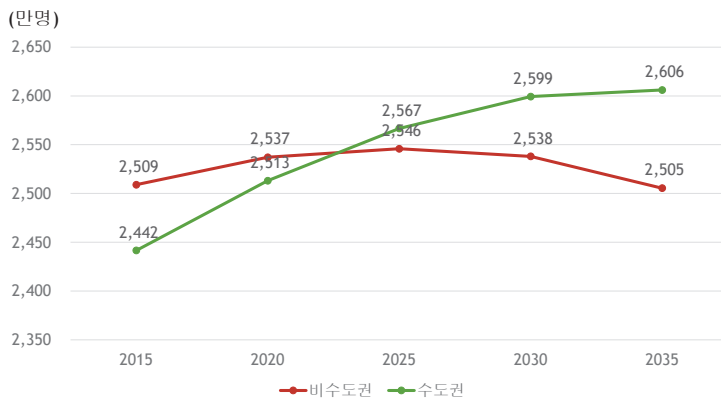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그 외 지역)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결과, 수도권집중도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음
- ▶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이 비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보다 훨씬 적음에도 각 지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비슷함

연도별 수도권집중도 변화 추이(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역총생산	48.9	49.3	49.2	48.8	49.0	48.8	48.2	48.2	48.7	49.0	49.4	49.6	
인구 수	48.3	48.6	48.9	49.1	49.3	49.4	49.5	49.6	49.4	49.4	49.4	49.5	49.6
총사업체 수		46.7	46.8	46.8	46.8	47.1	47.3	47.4	47.2	47.4	47.4	47.3	

3.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 인구 추계

- ▶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2015년 약 49.3%에서 2035년 약 51.0%까지 증가함
 - ▶ 수도권 인구는 2015년 약 2,442만명에서 2035년 2,606만명까지 증가함
 - ▶ 비수도권인구는 2025년까지 약 2,546만명까지 증가하나 이후 2035년까지 약 2,50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수도권
2015	50.7%	49.3%
2020	50.2%	49.8%
2025	49.8%	50.2%
2030	49.4%	50.6%
2035	49.0%	51.0%

*광역시도를 분석단위로 추계함
*최근 인구변동이 크거나 타 지자체를 통합한 세종시, 청원시, 창원시는 제외함

시사점

시사점

- ▶ **현재의 소멸수준이 20년 뒤 인구감소를 충분히 예측하지는 못함**
 - 현재 인구구조는 어느 지역이던 노인인구의 수가 아동의 수보다 큼
 - 또한, 현재 베이비부머인 세대가 20년 내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노인층은 더욱 두터워짐
 - 동시에 사망률이 출산률보다 낮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당분간 지속됨
 - 따라서 20년 내에는 인구감소보다는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 **소멸위험이 높았던 지역 중 인구가 상당히 증가한 지역들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군(농촌)으로의 순이동 증가가 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순이동이 증가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시도해볼 수 있음
- ▶ **소멸위험이 낮았으나 급격히 높아진 지역은 대부분 지방도시들임**
 - 두터운 중장년층이 노인층으로 다수 편입하기 때문임
 - 급속히 진행될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농산어촌 정책과 도시정책 동시 추진이 바람직)
- ▶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05-2010년 대비, 2010-2015년에 주요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이 전반적으로 낮아짐
 - 지표의 개선 수준이 2015-2020년 사이에도 추계 결과와 유사한지 확인해야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

지방위기냐? 지방소멸이냐: 지방활력의 시사점

- ▶ 지방위기가 지방소멸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
- ▶ 지방위기의 상황을 타파할 정책: 조화로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맞춤형 자치분권과 계획협약
 - 초광역지역거점도시의 육성으로 혁신도시 등과의 기능적 네트워크 구축
 - 압축마을의 건설로 고령화에 대비
- ▶ 안정적 공공 서비스, 조합 등 사회적 경제 등 지역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젊은 세대의 유치
- ▶ 복수 주소제도(2개의 주소 인정)

39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행정체제의 구축

- ▶ 협약, 조합 등 사무의 공동처리
- ▶ 광역 또는 초광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권한, 재정, 인재 등등
- ▶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 다양화: 기관통합형의 채택 등
- ▶ 도의 기능강화(인구감소 및 소멸위험 농산어촌 지역): 공동사무처리, 공무원의 파견, 도의 집행기관 설치, 도의 직할
- ▶ 읍면자치의 부활

40



감사합니다.

41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학의 역할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학의 역할

국가정책포럼 발표자료
김의영 (정치외교학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제 6 회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중 -
- 지방분권 개헌 무산 후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노력 지속
-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 주민참여 제도 확대(예: 주민조례발안제)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예: 지방이양일괄법 등)
 - 지방의회 강화(예: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
 - 재정분권(예: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을 넘어 6:4로)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예: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등
-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정책적 고민을 넘어 보다 혁신적인 아래로부터(bottom-up)의 시각과 실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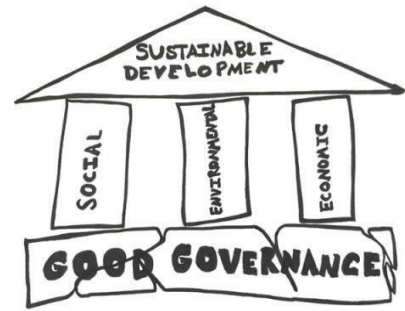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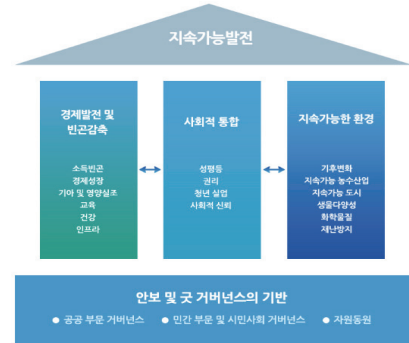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살라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존중 민주주의 실현 2. 소중으로 품합하는 공평한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성장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안정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 4. 노동중심·생명을 존중하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들어오는 동산이촌 4. 지역균형발전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지속가능한 발전 이란?: UN 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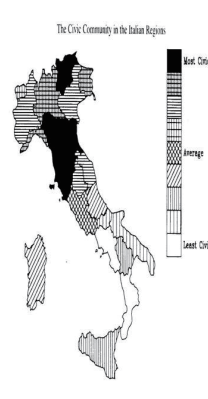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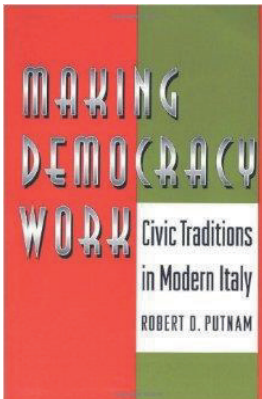


“모든 수준에서의 반응적이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의사결정과정 보장 (SDG 16.7)”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 시민공동체, 사회적 자본, 굿 거버넌스

- 이태리 지방자치 도입 20년 후 지역별 정치경제적 성과
- 시민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이 핵심적 성공 요인
- 잘 사는 곳(경제 수준), 많이 배운 곳(교육 수준)이 아니라 시민공동체가 자리 잡은 곳,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곳(시민사회 수준)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줌 => **굿 거버넌스의 수요와 공급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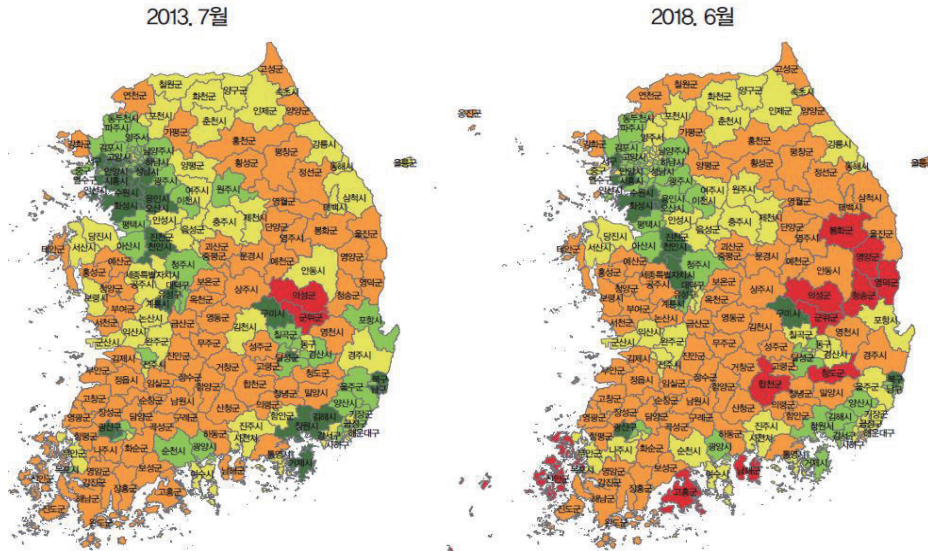


시민공동체가 구축된 곳에서는 주민들의 조직화가 수월하고 이들의 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정부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또 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할 줄 아는 시민성을 소유한 주민들이 정책 실현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너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덜 '시민적인' 지역의 시민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냉소적인 방관자가 되거나 위계적 후견주의의 그늘 아래서 간청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지방소멸의 위기 1

시·군·구 수준 지방소멸 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조사, 2018)

✓ 지역 격차의 고정화. 위험지역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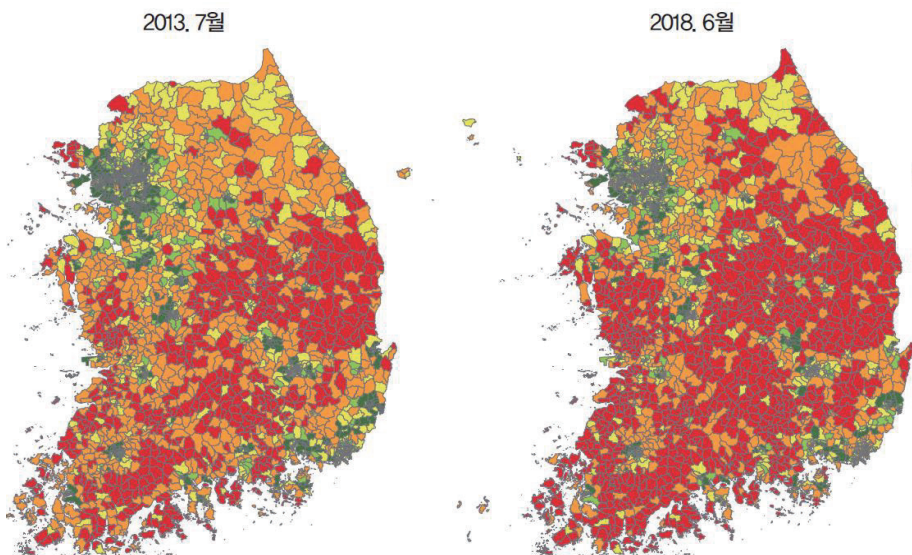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7월호, p. 7)

지방소멸의 위기 2

읍·면·동 수준 지방소멸 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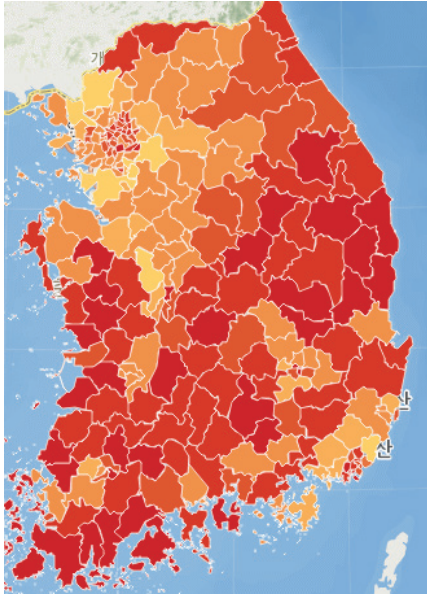
✓ 지역 내 문제가 보다 심각함 => 지역 내 대책이 시급함.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7월호, p. 9).

지방소멸의 위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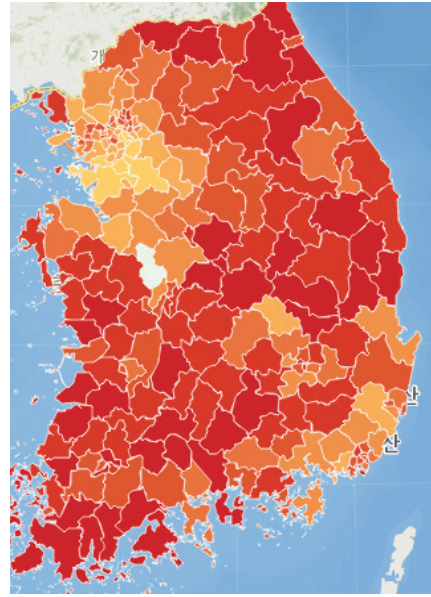
인구 증감 현황(2000-2017)



*빨간 색일수록 인구가 감소했음.

*출처: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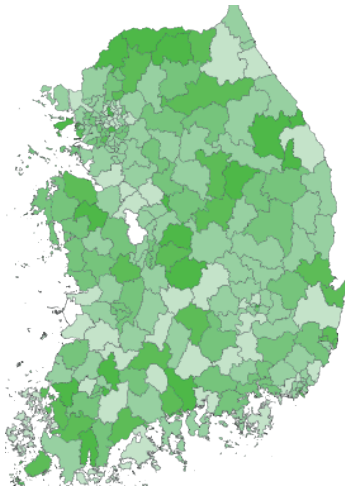
재정자립도(2017년 예산)



*빨간 색일수록 자립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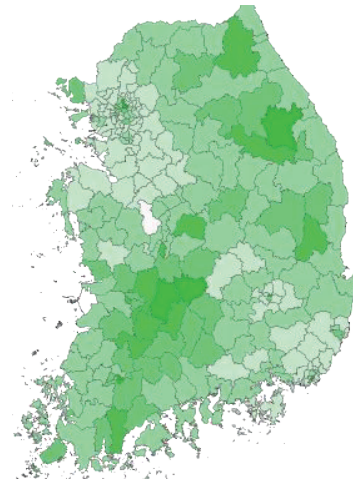
지방자치의 기회 1

“자발적인 시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014)



*참여율=연간 연인원/인구.
*색깔이 진할 수록 참여율이 높음.
*출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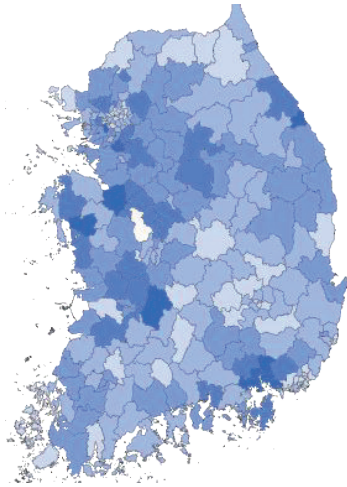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조직” 인구 만 명당 제3섹터 조직 수(2016-2017)



*제3섹터=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의 합계.
*색깔이 진할 수록 조직 수 규모가 큼.
*출처: 행정자치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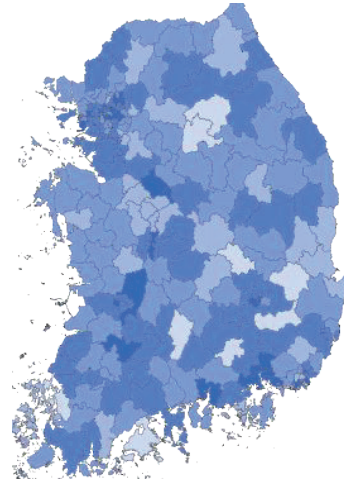
지방자치의 기회 2

“일하는 지방 의회”
지방 의회 의정 활동(2014-2017)



*조례 재·개정의 총 건수.
*색깔이 진할 수록 활동 수준이 높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책임 있는 지방 행정”
지방 행정부 청렴도(2016)



*종합 청렴도 지수.
*색깔이 진할 수록 청렴도가 높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위기를 기회로

- 소멸위험지역에서도 자발적 시민과 풀뿌리 시민조직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의회와 행정부의 활성화 수준도 재정자립도나 분권 수준과 특별히 관련성 없음
- 시·군·구, 읍·면·동 수준에서 시민, 시민사회, 풀뿌리 의회와 정부가 함께 자발적, 창의적으로 내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시각과 혁신적인 실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대학의 역할:** 고등교육기관 본연의 수월성 교육/연구에 더하여 지역과 대학의 협업 강화를 통해 보다 실질/실천적으로 지역문제에 대처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함.
- **대학의 지역기반 수업 프로젝트(Community-Based Learning, CBL)**
- **서울대의 역할?**

서울대 지역기반 시민정치 수업 프로젝트 (2015~2018)

- 6번의 지역 기반 시민정치/경제 수업을 수행
 - 2015년 1학기 "서울 동네 안의 시민정치" 수업
 - 2016년 1학기 "전국 동네 안의 시민경제" 수업
 - 2016년 2학기 "관악구의 시민정치" 수업
 - 2017년 1학기 "시흥시의 시민경제" 수업
 - 2018년 1학기 "성북구의 시민정치" 수업
 - 2018년 2학기 "시민정치, 정치학-인류학 융합 수업"



주민 대상 '소셜픽션 워크숍'을 통해 미래 비전 창조



현장활동을 통해 대화와 참여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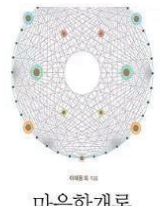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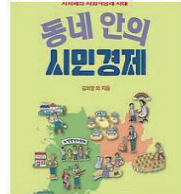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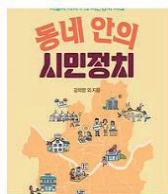
시장, 구청장 인터뷰를 통한 정책 점검



시민활동가, 공무원, 의원들과 함께 지역혁신

수업 프로젝트 결과물

1. 단행본 <관악구의 시민정치> 등 7권
2. 학술 논문 <한국정치학회보> 등 7편
3. 학생 학회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 세계정치학회 (IPSA), 세계정치학학생회(IAPSS) 등
4. 신문기사: 중앙일보 '동네 안의 시민정치' 기획 시리즈 (2015), 한겨레 서울 & 기획기사 시리즈(2016) 등
5. 실천 프로젝트: '관악 시민의 밤', 관악구 의정감시 조례 제정, 시흥시 사회적 경제 발전방안 수립 등



학생 연구결과 발표 및 민-관-학 접지 토론회

관악구 시민 정치 워크숍 관악 시민의 밤

■ 일시 : 2017년 05월 26일(금) 15: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삼각막

■ 분야 : 도시재생, 환경, 마을교육, 주민참여예산, 사회적 경제, 대의민주주의

■ 오시는 길 :
대동교를 이용시 서울대교구 예지이동 2호선신광명 출구 → 지하철역 버스 이용, 영등포구 하차 또는 학교 셔틀버스 이용, 대학본부 하차
자카를 이용시 광복에서 300m 좌회전 → 나들문 1에서 좌회전 → 아시아연구소 주차장

■ 문의 : 02-880-2110, 02-879-5582

■ 주관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협력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센터

정치학 분야의 전국적 확산: 2018 한국정치학회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

- 한국정치학회는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분과위원회'를 설치
- 전국 19개 대학, 20개 과목을 개설 진행

- | | |
|-----------------------------|------------------------------|
| ● NGO와 시민정치
경희대, 미우라 히로키 | ● 갈등과 해결 세미나
대구대, 이소영 |
| ● 글로벌 리더십 연습
서울대, 김의영 | ● 글로벌 리더십 연습
서울대, 김주형 |
| ● 마을정치론
고려대, 신재혁 | ● 마을학개론
연세대, 이태동 |
| ● 세계화시대의 로컬거버넌스
연세대, 허재영 | ● 시민교육
경희대, 채진원 |
| ● 시민정치론
건국대, 이현솔 | ● 시민참여와 민주정치
조선대, 공진성 |
| ● 여론과 정치마케팅
조선대, 지병근 | ● 용산구 지역정치 프로젝트
숙명여대, 김연숙 |
| ● 절경론
한림대, 김재한 | ● 정당정치론
명지대, 김용호 |
| ● 정보사회의 정치
서강대, 류석진 | ● 정치학과 현장연습
한국외대, 이재욱 |
| ● 지방정치실습
아주대, 강신구 | ● 지역연구세미나
증광대, 손병권 |

프로젝트 홈페이지 개설
<https://rilla7.wixsite.com/civicpolitics>



정치학을 넘어 => 전국 사회과학 거점 대학의 확산

- 전국 (사회과학) 대학에 지역 기반 수업 프로젝트 개설
- 각 수업에서 교수, 학생, 시민, 시민활동가, 시·군·구 공무원 등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를 수행. => **Public Engagement**
- 대학이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현장에 뛰어드는 교육혁신 그리고 대학-지역의 연계 강화에 의한 지역혁신을 통해 21세기에 걸맞은 사회혁신 패러다임을 전국의 각 대학을 거점으로 창조·확산시키는 프로젝트.
-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설립 => 프로젝트 플랫폼으로서 수업 지원, 네트워킹,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
- 전국 차원의 지역기반 교육, 연구, 실천의 혁신을 선도함.

